

# 천일염 광업이 아닌 수산업

기고

김문수

전남도의회 의원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법적으로 광물로 분류되어오다가 2008년 3월에서야 광물이 아닌 식품으로 인정됐다. 천일염은 법적으로 엄연히 식품이다. 그렇지만 법 제정 후 16년이 지난 지금도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천일염은 비 금속물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천일염은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됐으며 수산업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천일염 생산을 어업(수산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조는 천일염 생산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지는 신안, 영광을 비롯한 전국 19개 자치단체에 927개소가 있으며, 이 중 전남에

93%인 862개소가 있다.

어업의 경우 2025년부터 어업소득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 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비과세를 원칙으로 소득세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어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천일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천일염 생산소득 총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정부에 대한 천일염 생산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어업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면 소득세는 개소당 약 624만 원 정도가 절감됨에 따라 2024년 가동되는 생산염전 803개소를 대상으로 보면 연간 50억원 이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재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어민을 상대로 세수 확대를 꾀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바뀐 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기준에 의할 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광업으로

분류되는 행태가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어민들은 천일염을 광물로 보던 '염산업법'이 폐기되고, 이제 천일염이 엄연히 '식품', '수산물'로 분류하고 있는데도 관계부처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천일염 생산자가 고스란히 소득세법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과된 세금을 생산자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갯벌 천일염 생산량의 86%인 24만톤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방식도 외국처럼 광산에서 캐내는 암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변경 분류해야 한다.

천일염 산업과 농·어업 간 과세 불평 등 해소를 위한 천일염 생산 소득세를 비과세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천일염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광업이 아닌 어업(수산업)으로 개정 하길 바란다.

## 社說

# 허심탄회한 논의 필요한 전남 의대 신설

## 전남도 이해 당사자 회동 제안

전남도가 국립 전남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 회동을 제안했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주의를 버리고 균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번 회동이 꼭 성사 돼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의료 교육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길 기대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목포시와 순천시, 목포대와 순천대에 공문을 보내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 5인 회동을 제안했다. 회동 예정 일자 는 휴일인 12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동·서부권 중간지점인 보성군청 회의실이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정부가 민생토론회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화하고 '전남도에서 지역외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진해 줄 것'을 공개 요청한 점에 주목, 공모를 통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전남에 국립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전남 도민에게 역사적 소명이다. 당장 지역간의 의료 불평등 심화로 전남지역 주민들은 의료 불모지에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차별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지역만이 옳다는 소지역주의는 공멸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목포와 순천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전남도내 의대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명분을 정부에 실어줘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인재와 투자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 지역 특화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것도 지역으로서의 크나큰 손실이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가장 큰 가치는 지역 사회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 전남도와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와 순천대는 열린 마음으로 이번 회동에 적극 참여해 최적의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 차별받는 전남도민의 헌법적 권리를 '우리만 옳다'는 소지역주의로 무산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 지역 미래 달린 평두메 습지 랍사르 등록

## 광주시·시민 함께 지혜 모아

국내에는 광주 장록국가습지 등 25곳이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 습지의 랍사르습지 등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소식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평두메 습지를 둘러보고 랍사르협약 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습지는 수질을 정화하고 수많은 생명체에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모태다. 평두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광주시와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 스위스 랍사르협약 사무국에 평두메 습지의 랍사르습지 인정을 요청해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시는 북구, 무등산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평두메 습지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에 랍사르 습지 등록을 건의했다. 랍사르사무국은 1971년 이란에서 채택된 랍사르협약에 따라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랍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172개 국가 2503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북구 화암동 일대 평두메 습지는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목초습지다. 삶이나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786종에 이르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학적 가치와 생물다양성도 높은 지역이다. 수질 정화 기능과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기후 조절 기능도 뛰어나다. 시민은 물론이고 과학자와 학생들에게 자연과 생태계를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과 관광의 장소로도 가치가 높다. 평두메 습지의 보존과 활용에 지역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건강한 습지는 건강한 인간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는 평두메 습지가 랍사르습지로 등록돼 장록국가습지와 함께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전하려는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매립과 개발로 인한 인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심각성이 더해 가는 지구 생태 위기에 맞서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야말로 광주를 친환경 경쟁태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 사진으로 보는 세상

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이 백사장 곳곳에서 제작 중인 모래조각 작품을 구경하고 있다. 올해 해운대모래축제는 24~27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시스

##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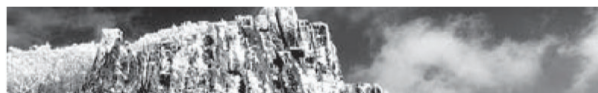
박 열매를 반으로 갈라 속을 비우고 남은 껍질을 말려 만든 그릇인 바가지는 '바가지를 긁다', '바가지 씌우다' 등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과거 괴질이 유행할 때 병 귀신을 쫓으려 바가지를 득득 긁어 듣기 싫은 소리를 내던 풍속이 있었는데, 가족의 잔소리가 귀신도 도망가는 바가지 소리만큼이나 듣기 곱지럽다는 데서 '바가지를 긁다'란 표현이 나왔다. 쌀이 없는 쌀 뒤주 바닥을 바가지로 박박 긁으며 남편의 경제적 무능함, 빈곤함을 간접적으로

## 바가지

말 청나라에서 들어온 도박인 '십인계(十人契)'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부터 10까지 쓰인 그릇이나 바가지를 이리저리 섞은 뒤 숫자를 맞추는 방식인데, 실패할 경우 건 돈을 모두 잃게 돼 '바가지와 독박을 썼다'고 푸념했다 한다.

봄꽃이 만개한 5월,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각 지자체들은 지역을 넘어 전국 최고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채로운 콘텐츠를 내세워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



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지난해 외국인 유튜버로부터 시작된 '어묵 한 그릇 만원' 홍역을 치렀던 모 지자체는 올해 가격표시제 시행 등 전 점포 단속 등 강력한 규제·감독을 진행했다. 덕분에 올해는 많은 이들이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축제장을 나올 수 있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지역축제=바가지'가 자리잡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물가의 비명이 날카로워졌다.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탓에 가정의 달 5월은 '가난의 달'이 됐다. 가족

들끼리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쌓기에도 모자란데, 현실은 가족들 용돈과 물가부터 걱정한다.

정부가 지역축제 먹거리 요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고객 불만이 여러 차례 발생한 축제는 평가를 통해 차기 문화관광축제 지정에서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민·관 모두 합심해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를 제공해 '바가지 축제'의 오명을 벗어나길 바란다.

양가람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